

大巡思想과 韓國政治

— 解冤相生 思想을 中心으로 —

楊茂木*

目 次

- | | |
|---------------------|--------------------|
| I. 연구의 시각 | 1. 정당정치의 부재 |
| II. 해원상생 사상의 의의 | 2. 행정권의 우월화 |
| 1. 해원의 의미 | 3. 부정선거 |
| 2. 상생의 의미 | 4. 비민주적 정치행태 |
| 3. 해원상생의 의의 | 5. 지역주의의 심화 |
| III. 해원상생과 민주주의의 이념 | V. 한국의 해원상생 정치의 실현 |
| 1. 인간생활과 해원상생 | 1. 한국 정치의 과제 |
| 2. 민주정치와 해원상생의 이념 | 2. 해원상생 정치의 실현 |
| IV. 한국 정치의 실태 | VI. 결 론 |

I. 연구의 시각

한국 정치는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시

*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행해 왔지만,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명시하고 민주 정치를 지향해 왔지만, 실제의 정치 상황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치 위기와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왔다. 즉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고 물리적인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변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의 정치도 문제는 있다. 다만 문제가 크냐 작으냐, 심각한 것이냐 아니냐 등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나 정치 문제는 항시적(恒時的)이고 항존적(恒存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민주 정치가 잘 발달된 나라라 하더라도 이상적인 상태의 정치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정치는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화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파생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의 정치적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민주 정치가 발달한 나라의 정치문제는 위기상황이 되지 않고, 한시적 문제로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문제는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데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정치적 문제의 원인은 정치 변동이 통치자의 정권 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민주적이며 독선적인 정치 및 통치 행태에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야간에 극한 대립과 투쟁만이 존재하여 왔다. 현재도 문민정부가 평화적으로 탄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야간의 정치 행태는 과거와 같은 대립과 갈등으로 성숙한 민주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정치가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또는 소수의 정치 지도자를 위한 정치만 계속되고 있다. 정치란 본래 국민의 다양한 의

사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야만 하는데, 한국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안만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여야 정당들이 상극적(相剋的)인 행태만을 갖고 있으며, 상대를 인정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상생적(相生的)인 정치를 실천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여당과 야당간의 극한적 대립과 투쟁의 정치가 아니라, 해원과 상생의 정치 행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원상생적 정치는 곧 민주정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大巡思想)의 하나인 해원상생(解冤相生)을 한국의 정치에 적용해야 하겠다는 관점에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해원상생의 의의와 민주정치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원상생의 적용 필요성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한국 정치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국민 의사를 통합하는 민주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적 정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Ⅱ. 해원상생 사상의 의의

1. 해원의 의미

해원(解冤)은 어의대로 보면 원통함을 풀어 평안한 상태를 갖는다는 뜻이다. 冤이란 원통할 원, 굽힐 원, 죄없을 원이라 한다. 이러한 의미는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 굽히게 되는데 대해 원통함을 갖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통함을 갖는 것이다. 인간이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대개 원한을 갖게 된다.

원한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커다란 피해나 고통을 주었을 때, 자신이 받은 것만큼의 피해나 고통을 되갚으려는 것을 말한다. 즉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원한과 유사한 용어로는 척, 원통, 한 등이 있다. 척(慼)이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원한을 의미한다. 척은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는 것이 척이다.

원한은 한과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恨)이란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한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살지 못한다거나,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을 때 스스로 자신을 한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원한(怨恨)을 척, 원통, 한과 같은 의미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원한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등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발생하게 된다. 사람이 원한감정을 느끼는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한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생긴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써서 형벌을 받았을 때에 원한을 갖게 된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아 큰 피해를 입게 되면 원한감정이

저절로 생기게 된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원한이 생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데,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억울해 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노력한 정도라면 충분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억울해 하고 원통하게 생각한다.

셋째, 원한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생기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원통함을 느끼게 된다.

넷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도 원한감을 갖게 된다. 인간의 욕구는 동물적 욕구라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인간의 최고 욕구라 할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스러움과 원통함을 갖게 된다.

상제께서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¹⁾ 라고 가르친 것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원한을 갖게 된다.

다섯째, 어떤 경우에는 언제나 선하게 살고, 더욱이 다른 사람들에게 착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비난이나 모함을 받거나, 자연재해 등을 입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유없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원한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전생의 착이라 하는데, 이는 상극으로 선천시대에만 나타나는 원한이라 할 수 있다.

상제께서는 원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²⁾ 라고 하였고, 나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을 무시하

1)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법: 3-24.”,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254

2) 같은 책, “공사: 3-29.”, p. 144

는 데서 반발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다가 원한을 품어 척을 맺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한과 척을 풀어 버리는 것이 바로 해원이다.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해원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원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척을 짓지 말고, 척을 지었다면 먼저 척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상제께서는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척을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어버림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³⁾고 하였고,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⁴⁾ 라고 가르쳤다.

둘째, 이유 없는 봉변을 당했거나 자연적 재난을 당했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원한을 갖지 말아야 한다. 상제께서는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 속으로 풀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 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느니라’고 하였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사유없이 피해를 입거나 비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덕을 베풀라고 가르쳤다.

셋째,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예의를 지키라고 하였다. 상제께서는 ‘지금은 해원시대이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⁵⁾ 라고 하였다.

넷째,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덕을 베풀고, 잘 되도록 빌어 주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복수심을 갖지 말고 덕을 베풀면, 해원이 되고 오히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원수의

3)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27

4) 같은 책, “교법: 2-15.”, p. 249

5) 같은 책, “교법: 1-9.”, p. 222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6) 라고 하였다.

다섯째, 사회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는 경우의 해원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사회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계층과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존하여 함께 살고 있는데, 열악한 소외계층의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은 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상생의 의미

상생은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상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환경과 서로 협력하면서 공생 공존하는 것을 뜻한다. 즉 상생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고 협력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상생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은 본래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균형이 파괴되어도 자체의 조절능력에 의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자정능력이 있다. 따라서 자연의 균형과 평형상태는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데 기본조건이 된다. 상생은 인간이 자연의 균형과 평형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자연적 질서를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자정능력의 범위내에서 인간의 자연 이용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태고로부터 자연의 위협과 미지의 세계에 대해 불안해 하여 왔으며, 문명의 발달로 자연에 대한 불안은 극복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문명과 과학기술의 고도화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여 인류와 생물의 멸망을

6) 같은 책, “교법: 1-56.”, p. 231

초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다.

둘째, 상생이란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상생이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을 의식하고 스스로 옳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인간은 자기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성장 환경, 개인이 처한 상황, 가치관, 소질과 능력, 교육 정도와 관심사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생활의 다양성은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결정이나 가치도 존중해야만 한다. 자신이 결정한 것과 가치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과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자신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한 것이다.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인간 상호간의 생활에 있어서 상호 인정과 존중이 상생인 것이다. 그리하여 상생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 또는 공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생은 인류가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조건이며,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윤리인 것이다.

인간생활에 있어서 상생의 의의와 실천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제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⁷⁾ 라고 하였고,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⁸⁾ 라고 가르쳤다.

7) 같은 책, “교법: 1-34.”, p. 227

8) 같은 책, “교법: 1-38.”, p. 227

셋째, 상생은 인간과 신과의 공존도 의미한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신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고 있다. 신의 세계를 명료하게 인지할 수 없고 또 구체화할 수도 없지만, 인간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여 왔다. 상제께서는 신명세계를 인정하고 신명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상제께서 신명을 인정하고 교법(教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은 사람이 먹는대로 흠향하니라.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4대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그리고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니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⁹⁾ 라고 하였다.

또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 지금은 신명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¹⁰⁾ 라고 하였다.

상제께서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구릿골을 찾아 왔기에 별안간 꾸짖으시기를 ‘나는 독하면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하면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라. 네가 어찌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런 참되지 못한 행위를 하느냐.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¹¹⁾ 라고 하였다.

또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라고 하고,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

9) 같은 책, “교법: 1-49. 50. 66.”, pp. 230~232

10) 같은 책, “교법: 3-5.”, p. 246

11) 같은 책, “교법: 1-42.”, pp. 228~229

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¹²⁾고 하였다.

이처럼 상제께서는 신명을 존귀하게 모시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임을 가르쳤다. 인간이 신명을 존중하는 것은 곧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간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쌓으면, 신명이 인간을 도와주어 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¹³⁾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갖지 말고, 척을 지었다면 먼저 스스로 척을 풀려는 노력을 하라고 가르쳤다.

상제께서는 상생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 말라. 아직도 남아 있는 복이 많으니 남은 복을 구하는 데에 힘쓸지어다'라고 하고, '너희들은 항상 평화를 주장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밖에서는 난리가 일어나리라'하고, '후천에서는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꺾일지라'¹⁴⁾ 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화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관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¹⁵⁾ 라고 하였고,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 오리라'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후천에서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려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¹⁶⁾ 라고 하였다.

즉 모든 사람들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남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더욱 잘 되도록 빌어 주어야 하며, 그리고 후천시대에는 선천시대

12) 같은 책, "교법: 1-29. 2-17." , p. 226. p. 237

13) 같은 책, "교법: 3-24." , pp. 254~255

14) 같은 책, "교법: 3-9. 1-53. 2-11." , p. 231. p. 237. p. 247

15) 같은 책, "교운: 1-17." , p. 160

16) 같은 책, "교법: 1-68." , p. 233

에서 핍박받던 소외계층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권리를 갖고 유능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고 설파하였다.

3. 해원상생의 의의

인간사회는 유사 이래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 부조리, 투쟁, 전쟁 등으로 개인과 사회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파멸을 당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인류가 평안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인간사회가 이러한 불행과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뜻을 이루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해 하고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인하여 서로 척을 짓고 서로 원한관계가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인간사회가 만약 이기적 심정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면, 약육강식의 무질서로 인하여 약자는 강자에 의해 피해를 보고 희생만 당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은 사회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서는 생존까지도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인간은 원래 선한 마음과 이성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만들어 왔다. 인간이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는 예절과 윤리, 법 등이 있다.

예절과 윤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률은 강제력을 통해 타율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타율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법률은 질서 유지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윤리라 할 수 있다. 윤리는 사회 규범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행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인간은 자기가 소속한 사회와 조직에서 형성된 윤리를 존중하고 준수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윤리 규범은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특정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규범도 있다. 인간이 윤리 규범대로만 행동하면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윤리 규범 중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있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고루 통용되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윤리 규범 중에는 상위규범도 있고, 또 하위규범도 있다. 법률도 헌법과 같이 기본법으로 최고법이 있고, 또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하위법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인간 사회의 윤리 규범 중에서 기본적인고 변화되지 않는 윤리 규범으로서 항상 존중되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윤리 규범은 해원상생이라 생각한다.

해원과 상생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원상생은 인간생활의 기본 규범이며,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척과 원한 등을 풀어 갈등과 대립이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려는 노력이 바로 해원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원한을 해소할 때 상생은 가능하다. 대순사상에 따르면 선천시대에는 서로 자기가 잘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으로 원한이 많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빌어주고 도와주는 해원상생의 후천시대에는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해원상생이 되지 못하면 개인이나 사회, 국가나 국제 관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원상생을 하지 못한 개인들은 원한감정을 갖게 되는데, 원한감정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원한감정은 다른 사람을 저주, 증오, 복수, 좌절감 등을 심하게 느끼게 하고, 실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 척과 원한은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병까지 앓게 하여 인간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해원상생을 하지 못하면, 집단적 투쟁이나 극단

적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사회문제는 대부분이 사회내의 집단들이 이기적 태도로 자신들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기적 태도는 다른 집단에 피해를 주게 되고, 이러한 피해는 원한감을 갖게 하여 상생이 아니라 상극으로 갈등상태를 야기하게 된다. 상극적인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집단을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게 만든다.

국가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상생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국가내에서 해원상생이 실현되지 않으면 내란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 국가와 국가간에서 원한을 갖게 되면, 적대국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게 된다. 따라서 전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더욱 더 인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Ⅲ. 해원상생과 민주주의의 이념

1. 인간생활과 해원상생

인간의 사회생활은 두 개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양면성이 있다. 그 양면성 중의 하나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개인화 경향이다. 인간은 사회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리하여 자신을 특정화하려는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자기 의지대로 처리하려고 하며, 사회 질서와 법 집행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자기 자신만은 예외적인 대우를 받으려 한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제휴하여 사회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삶의 의미나 행복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갖고 생활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인간이 능력을 개발하거나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듯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상태에서 인간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어떤 조직과 집단에 소속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이나 집단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된다.

인간의 개인화나 사회화는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개인화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화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해지면 자신이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경쟁을 하게 된다.

인간은 개체로서 특정화하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시기하며 지속적인 경쟁심과 만족할 줄 모르는 소유욕과 명예욕·권력욕 등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 사회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 폭력과 투쟁 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중시하는 이기심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산, 권력, 지위, 기회 등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이든지 이러한 재화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으로써 개인들 간의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회의 한정된 재화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많이 획득하게 된다.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정된 재화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때로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약자를 핍박하게 되면, 이들 상호간에는 자연 원한관계가 쌓이고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빈부와 지역개발의 격차, 물질만능주의의 확산, 부조리와 부패 등 비인간적인 행태의 확산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사회정의 또는 분배정의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부가 편중되고 국민들의 기대욕구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욕구 증가는 만족을 모르고 더 큰 욕구를 추구하여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절대빈곤층이 있으며, 부유층의 과소비와 낭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계층이 많아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으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소외감과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계층이 많다. 자연의 개발과 이용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자연과 인간, 그리고 내면 세계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 윤리관 등이 상실되고 서구화되어 많은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간의 단절, 경노사상과 부모공경 정신의 약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와 기능의 변화 등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

해의식의 확산 등으로 원한이 급증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는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매우 많은 것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불만을 가진 계층이 대부분이고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불안과 원한 감정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신과의 관계 등에서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는 새로운 윤리 규범을 필요로 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윤리 규범은 해원상생이라 생각한다. 인류 사회의 원한관계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의 원리를 따라야 하겠다.

해원상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순진리의 안심과 안신, 그리고 훈회를 실천해야 한다. 안심(安心)이란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하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을 편벽하지 않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을 갖고, 허무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해야 한다. 안심은 순결한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심은 해원상생의 기초가 된다.

안신(安身)은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法禮)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심에 의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안신이란 인간의 행동이 사회 규범에 적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남들로부터 척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⁷⁾

훈회(訓誨)는 안심과 안신을 실행하는 대순진리의 행동 규범이다. 훈회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이다.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은 일신의 주이니 사람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17)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 15

마음에는 양심과 사심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고,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마음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의해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해야 한다.

(2) 언덕을 잘 가지라.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은 도심(道心)의 자취이다. 나의 선악은 말에 의하여 남에게 표현되는 것이니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남이 잘되는 여음(餘蔭)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말을 악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양(餘殃)이 밀려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화와 복은 언제나 언덕(言德)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언덕을 특별히 삼가야 한다.

(3) 척을 짓지 말라.

척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다.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호의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이다. 따라서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 양순, 겸손, 사양의 덕으로 남을 대하여 척을 짓지 않아야 한다.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은혜란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고, 저버림이라 함은 배반하는 것이니 은혜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경신(誠敬信)으로써 천지 보은의 대의를 세워 인도를 다하고 보명(保命)과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 발전과 공동 복리를 도모하며 국민의 도리를 다한다.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 육성은 스승

의 은혜이니 봉교 포덕(奉敎布德)으로써 제도(弟道)를 다하고, 생활과 녹작(祿爵)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을 다해야 한다.

(5) 남을 잘 되게 하라.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 원리요 구제창생의 근본 이념이다.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成事)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 협력이 되게 하여야 한다.¹⁸⁾

인간생활에 있어서 척을 짓지 않고, 원한을 풀고 공존공영하는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안심과 안신, 그리고 훈회를 실천해야만 한다.

3. 민주정치와 해원상생의 이념

인간은 정치생활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고, 서로의 이해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며 해소하여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 있다. 근대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일반 국민들은 통치권자의 지배의 대상이었지,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정치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근대 이후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계층이 정치생활의 주체로 등장하였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민주 정치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고 일반 국민들이 정치생활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민주화 될 때 가능하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다양한 국민 의사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적 정치제도와 국민들의 민주적 운영 능력은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18) 같은 책, pp. 18~21.;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포덕교화기본원리」(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75), pp. 14~16

데 있어서 각각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 정치는 실현될 수 없는데, 정치제도가 민주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민주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주 정치가 실현되지 못한다.

민주 정치제도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태도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민주적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태도를 갖고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존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곧 해원상생의 이념인 것이다. 민주정치와 해원상생의 이념에 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와 해원상생은 인간 존중의 사상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간 존중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자기 자신의 것 못지않게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 존중은 시민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기초인 평등과 정의의 원칙을 내면화한 덕목이다. 대순사상에서도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하느님도 의미가 없으며, 우주의 주인은 인간으로 보고 있다. 천지일월도 인간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한다.

둘째, 해원상생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극대화하고 있다. 원한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다. 원한을 해소하고 상호간에 존중하고 화합적 관계를 갖는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민주 정치에서 보장하는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나의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야만 한다. 즉 민주 정치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해원상생적 자유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화합하면서 자유로운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 해원상생은 사회에서 소외된 열등 계층의 원한을 풀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에서 우월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 때 척을 짓지 않고,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해원상생은 민주 정치의 평등원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신분적 특권을 배제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평등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해원상생과 민주주의는 준법정신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준법정신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준수할 때 국민들은 평안하고 안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공정하지 못하고 준법정신도 미약한 상태이다. 남의 권리를 존중하거나 공정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식과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척을 지을 수 있고, 원한을 살 수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안심과 안신, 그리고 다섯가지 훈회는 윤리 규범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법과 같은 것이다.

IV. 한국 정치의 실태

민주주의는 오늘날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최상의 정치제도로 인식되어, 모든 국가에서 찬양되고 있는 보편적 희망이 되었으며 영원히 인류가 가져야 할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왔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치는 실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경험과 정치제도를 갖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절대왕권체제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었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식민지 통치하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념은 존재할 수 없었고, 국민들의 기본권조차 철저히 유린당했다.

한국은 해방을 맞았지만 권위주의적인 독선적 지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은 얻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절대빈곤상태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과 극도로 혼란한 정치 체제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은 고려되지 않는 가운데 서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전과정을 밟아온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만 모방하여 도입하였다.¹⁹⁾

한국이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한 지 반세기가 되고 있지만, 민주화는 여전히 한국의 정치 과제 중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였지만, 실제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는 비민주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 정치는 항상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평가를 더 받아 왔다. 논문이나 평론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비판적,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시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한국의 정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겠다. 즉 한국의 정치가 형식적인 민주 정치로만 존재하였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 정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양무목,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고찰,” 「연구논집: 제11집」(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 1981), pp. 89~106

좁은 의미에서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그리고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여러 현상을 뜻한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권력의 쟁취와 유지의 과정이 현실 정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이견이 있게 된다. 특히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정치가나 정당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논리로 정치를 해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

한국은 모든 정치가와 정당들이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한 논리 전개를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다. 모든 정치 활동에서 자기들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들도 왜곡된 논리로 민주주의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당정치의 부재

정당은 현대의 모든 국가에서 정치의 기본 구조가 되고 있다. 정당은 모든 정치제도와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표출하고, 조정하며, 해결하는 매개적인 조직으로,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집단이다. 한 국가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당은 어떠하였는가?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당은 정당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았다. 정당을 발기하고 창당할 때에는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일체의 독재를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등 화려한 정강정책을 제시하였지만 대개 구호로만 그쳤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항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집권자를 위하거나 소속 정당을 위해서는 정당 정치의 개념조차 망각하는 그릇된 행태를 보일 정도였다.²⁰⁾

20) 양무목, 한국정당정치론(서울: 법문사, 1983), pp. 192~197

그리고 각 정권의 초기에는 정당간의 대화와 토론에 의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가,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등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제기되면, 대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수의 대결이 벌어져 여당에 의한 극단적인 야당 적대와 야당의 극한 투쟁이 반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외적인 요인 및 집권자와 행정에 의한 야당 탄압이 되풀이 되어 왔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의 원인은 야당보다는 여당에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장기 집권이나 목적 달성을 물리적으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반대하는 야당이나 언론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는 다수의 횡포와 자의적인 권력에 의한 독재만이 있게 마련이다. 즉 토론과 타협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는 평화적인 방법인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나 강압적 방법과 같은 비민주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정당의 문제로는 정치가의 이념 빈곤 및 정치 윤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소신에 의해 정당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정당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로운 정권 수립기나 선거기만 되면 정당이 급조되고, 국회의원 공천이 가능한 정당을 찾아 이합집산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이 당 저 당으로 옮겨가는 데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²¹⁾

또한 정당의 정강정책도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없고 거의가 유사하며, 국민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은 타락정치의 온상이었다. 이는 정권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 되어온 특징인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가 잘 말해 준다. 새로이 등장한 정치 집단에 의해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기성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부정축재자로 밝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규제당할 정도로

21) 1996년 15대 4·11총선을 마친 여야 정당들은 총선 이후의 새로운 정국에 대비, 당선자 위주로 당의 진용을 재정비하면서 무소속 당선자를 경쟁적으로 영입하는 바람에 국회 개원이 진통을 겪기도 했다. 동아일보, 1996년 4월 13~20일

타락한 정치인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의 정당은 정치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정당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는 정당은 있었어도 바람직한 정당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권의 우월화

현대 국가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합 기능이 감소되고 행정부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등 그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증가하는 국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권의 강화와 확대 경향이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행정은 입법과 사법에 비하여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와 행정의 일원화 경향을 가져 왔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행정권의 지나친 강화 현상이 나타났다. 끝내는 행정권의 절대적 우위로 행정 독주의 현상이 나타나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경시하기에 이르렀다. 즉 행정 기능의 확대에 의한 행정국가화 현상이 행정만능의 풍조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입법부인 국회는 무력화되어 제 기능을 잃었다.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의 지배인 국민의 참여를 제한시켰다.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 제시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은 채 행정부에서의 결정만으로 중요 시책이 시행되곤 하였다. 또한 국회에서의 심의도 형식화되어 행정부의 의도를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변질되었다.

또한 행정권의 강화는 무리한 정권 연장을 도와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정치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이 요구되는데, 한국의 공무원은 집권 정당의 정권 유지에 깊이 간여하여 왔다. 집권 정당의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권력이 개입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²²⁾

이와같이 집권 정당과 행정의 유착으로 인한 행정독재는 정치부재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서 경제개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위주로 강력히 추진되어 그 효과를 나타낸 점도 있었지만, 부수적으로 오히려 국민과의 괴리감을 불러 일으켜 행정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는 정치 불신을 가져 오기에 이르렀고, 이로부터 과생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참여적 정치문화보다는 비민주적·종속적인 정치문화로 퇴행시켰다.

3. 부정선거

선거제도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데 기본적 제도이다. 선거제도는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사의 표출과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을 한다. 민주정치는 공정한 선거에 의해 국민 의사가 바르게 표출되고, 대표가 선출되는나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주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이다. 민주 정치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선거제도의 확립에서 찾아야 한다. 선거없는 민주 정치란 존재할 수 없고, 자유스럽고 공정한 선거과정이 없이는 민주 정치는 불가능하다.²³⁾

한국 정치에 있어서 관권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제1공화국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했을 것이다. 선거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당을 대신한 정부의 대행선거(代行選舉)를 초래했다. 따라서 선거는 항상 불법, 부정이 개입되었고 그로 인해서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²⁴⁾ 그러므로 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는 당선이 기정 사실로

22)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선거과정에서의 검·경은 엄정 중립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여당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야당간에 「검경중립화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계일보, 1996년 8월 28일

23) 양무목, “14대 총선과 국민의 선택,” 「새물결」(서울: 봄호, 자유평론사, 1992), pp. 65~73. ; 양무목, “선거법 고쳐야 한다,” 「자유공론」(서울: 5월호, 자유공론사, 1992), pp. 78~87

24) 문창주, 한국정치론(서울: 일조각, 1980), pp. 300~305

인정받고, 선거는 그의 당선을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선거제도와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 민주 정치인데, 한국 국민들은 공정한 선거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 민주정치의 과제 중의 과제일 것이다.²⁵⁾

그렇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선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되는 행정권의 엄정 중립과 국민이 선거를 대하는 의식의 고양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고와 객관적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해야만 하겠다.

4. 비민주적 정치행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며, 민주국가란 법치국가이다. 민주주의는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법치를 통해서만이 그 구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란 국가 권력의 전단적(專斷的)인 지배가 아니라, 합리적인 법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법에 의한 지배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민 주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의사인 법률을 행정의 상위에 두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곧 근대 시민국가에서부터 행정 권력은 국민의 의사와 부합되어야만 객관화되고 효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입법부의 기능 약화로 입법과정에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국가 기능이 복잡·전문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새로운 국가 기능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 행정권의 확대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문제는 행정부에 입법부가 종속되어 국회의 자율적

25) 국회 제도개선특위는 4대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전국구제도의 개편, 대통령선거 운동 여부 및 정치자금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6년 8월 28일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데 있다.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합법화시켜 주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된 감이 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한 상태에서 무더기로 법률이 제정된 경우도 있었다. 제3공화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4공화국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제5공화국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헌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들을 제정하고 그것을 국민투표로 확정시켰다.²⁶⁾

이러한 법률 제정은 한국 민주정치의 중대한 위기를 유발시키곤 했다. 특히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국회가 아닌 기관에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민주적인 헌법이라 하더라도, 법률 제정과정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국가 권력이 피치자인 대중의 의사 반영을 결여한 채 성립되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편익에 따라 제정될 수밖에 없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화된 국민 주권인 국민 의사의 표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헌정사는 대부분 집권자의 권력 유지 또는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헌법개정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집권자 위주의 헌법 개정으로, 권력자의 자의를 정당화시키고 피치자의 자유를 공동화(空洞化)시키는 실력의 지배였다. 또한 이러한 헌법에 대한 비판 및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즉 권력의 절대화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유보시켰고 강압하였다.

한편 법의 지배는 재판에 의한 권리 구제를 의미하는데 사법부 역시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독립성을 침해받아 왔다. 즉 입법 사항의 전문 기술화, 법 집행자의 재량권 확대, 입법 내용의 양적 증대, 사법 통제의 제한 등으로 인 권 보장을 위주로 한 법의 구조적 기능에 회의를 갖게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유신 통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6) 양무목, “한국의 의회정치와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18집(서울: 한국정치학회, 1984), p. 395

5. 지역주의의 심화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정치는 지역주의 말세론이 흥미하고 있다. 이웃끼리 내 것 네 것이 없을 정도로 인정을 나누다가도 정치 문제만 제기되면 지역 갈등을 일으켜 반목과 대립을 일삼는 경우를 흔히 본다. 물론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아무 대립도 모순도 없고 아무 분화도 없는 것을 상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회내의 여러 모순과 대립을 합리적 권력에 의하여 통합할 정치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제도를 뛰어넘는 지역감정이 정치판을 휩쓸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²⁷⁾

일반적으로 지역주의는 전근대적 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역주의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평가 분석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기 보다는 지역적 정서에 의존한다. 여기에는 조상들이 남긴 어떤 초시간적, 초공간적인 보편원리나 고정불변의 최소한의 도의적인 생각도 무시된다. 그 지역의 인물이라면 그 사람의 인물 됴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지하고 따른다.

그런 배타적 지지기반을 전제로 해서 어떤 사람이 정당을 만든다면 '그 정당은 씨족이나 신분, 그리고 지방적인 편협성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안정되고 단합된 전국적 규모의 정당으로 발전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럴 때 정당들은 도당으로 되든가 아니면 지역적 부족적인 기반 위에 군림하고 있는 보

27) 내년(1997) 대통령선거를 1년여 남겨둔 가운데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계속적인 「지역 등권론과 지역간 정권교체론」 주장에 이어 신한국당 김윤환 고문의 「영남후보 배제론」이 불거져 나와 정가에 파문을 불러일어키고 있다. 신한국당의 이만섭 고문은 「지역간 정권교체론은 물론 당내 일각의 경상도 불가 - 경상도 배제론은 새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경상도는 안되고, 다른 지역은 되고가 말이 되는가. 되고 안되고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말 하고, 믿음 주는 사람은 되고, 거짓말 하고, 깨끗지 못한 사람은 안되는 것이다. 지역이 다르다고 거부하나. ...」라고 통박하는가 하면, 이회창 고문은 「패거리정치 및 당내 계파 청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찬종 고문은 「당내에 무슨 패거리가 있고 계파가 있느냐」며 「특정지역 배제는 신지역주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총재나 김고문이 어떤 복선을 깔고 얘기했던 그들의 「특정지역 배제론」이나, 이고문의 「영남단결론」은 여권이나 야권의 차기후보 결정과 나아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도 또다시 지역감정이 큰 변수로 대두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6년 9월 6일.; 조선일보, 1996년 9월 6일

스나 그 쫄개들의 집합체로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28)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집단은 필연적으로 집단이기주의가 국민 이익보다 앞서기 때문에 독선적인 생리에 젖게 되고 스스로를 국가 내지 민족과 동일시하면서 반대당을 반민족주의자 내지 국민통합의 훼방꾼으로 비판하게 된다. 이렇게 한 정치집단이 독선적이 되면 다른 정치집단들도 덩달아 독선적이 된다. 그리 하여 이들 정치집단들 사이에는 정치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종종 폭력을 앞세운 극한대립만을 일삼게 된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역 감정이나 지역 정서는 있었다. 자기 고향 사람이나 학교 동문, 혹은 집안 사람에 대해서는 정감이 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1987년 대통령선거 이후 나타나고 있는 투표에서의 지나친 지역편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비합리적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신 지역이 계층이나 연령, 성별이나 학력 등 여타의 모든 지표를 압도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은 반독재 투쟁의 찬란한 전통도, 민주주의를 향한 전국민적 열망도 하루 아침에 삼켜버리고 선거 때만 되면 지역이라는 기준에 의해 전국을 사분 오열시키는 형세를 만들어내고 만다.29)

한국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기원에 관해 여러 갈래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원을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논자는 고려 왕건이 왕권 안정책으로 후대 왕에게 당부하기 위해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 가운데 8조30)의 후백제인에 대한 유훈이 그 기원이라고도 한다.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위해 경제개발정책을

28) Edward Shils, *Political Development in New States*(The Hague, London, Paris: Mouton & Co., 1965), p. 14

29) 홍기운, *지역주의와 한국정치*(서울: 백산서당, 1996), pp. 3~25

30) 훈요십조 제 8조는 다음과 같다. 「차현(車峴): 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외는 산형과 지세가 함께 배역(背逆)으로 달리니 인심도 또한 그러한지라, 저 아래 고을(주군) 사람이 왕정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과 혼인하여 국정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를 변란케 하거나 혹은 통합된 원한을 품고 거동하는 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또 일찍이 관사(官寺)의 노비와 진역(津驛)의 잡척(雜尺)에 속하던 무리가 혹은 권세에 붙어 이면(移免)하고, 혹은 왕후 궁원에 붙어 언어를 간교하게 하여 권세를 농하고 정사를 어지럽힘으로써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벼슬자리에 두어 일을 보게 하지 말지어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지역과 받지 못한 지역간의 개발 격차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면,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권의 권위주의에 맞섰던 김영삼·김대중 양 김씨가 분열된 결과가 대통령선거의 투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그 와중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질게 깔리게 되고, 연이은 선거에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의 문제가 정치이슈가 되었다고도 한다.³¹⁾ 그러나 이 지역주의는 인간의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판단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반영물로 나타났다가보다 어느 특정 인물과 결합된 정서적 분출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은 정치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적 통합과 일체감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적 통합과 일체감 조성이란 '그 사회를 분열시키는 적대심을 제거하고 그 사회를 파괴시킬 위험성을 지닌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하며,'³²⁾ 이는 지배자의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정치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 및 다원적 정치과정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독선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독존식 아집만을 낳았다. 그리하여 지역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켜 민주정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31) 같은 책, pp. 211~245

32) Maurice Duverger, *Sociologie Politique*, 3d e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p. 220

V. 한국의 해원상생 정치의 실현

한국 정치의 과제는 한국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정치를 통해 국가 발전의 목표가 정립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 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치의 과제와 해원상생적 정치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정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 한국 정치의 과제

한국 정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가 있다. 즉 한국 정치의 실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당제도, 의회운영, 정치가들의 행태 등 비민주적인 요소가 매우 많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과제이며, 정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국 정치의 과제는 보는 사람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민주정치의 실현, 사회통합, 국민복지의 증진, 민주적 시민의식의 함양, 평화통일의 실현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민주정치의 실현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참다운 행복과 국가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은 진정한 민주 정치가 실현될 때 가능하다. 민주 정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제도와, 이러한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민주정치는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사회 문제들은 정치적 토론과 결정의 대상이 되며 일반 국민들은 정치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는 국민이 주체적 역할을 하며, 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는 국민 생활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

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는 국가 권력과 국민의 참여, 그리고 사회내의 개인과 집단 간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가져오는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한국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민주화와 국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대되어 정치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증대되고 있어 민주정치의 정착과 발전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부와 안전, 지위 등과 같은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모든 국민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거나, 권력의 남용과 부정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국민들도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와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을 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민주적 절차와 규칙에 따라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다.

나. 사회통합

비교적 단기간에 놀랄만한 산업화를 이룩한 까닭에 한국은 사회의 다양한 여러 집단간에 갈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량생산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증가하고 있다. 즉 직종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직종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이익집단이 증가하고 각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의 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화되면서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여 노동운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등 기업주와 협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운동, 자연과 환경 보호 등을 비롯한 시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식의 변화와 정치참여 욕구가 확대되어 정치와 정부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혐오 시설과 위험 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맹목적인 반발이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시대에서부터 발생되어온 학생의 현실 참여는 현재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가 안정적으로 발전 하지 못하고, 비합법적인 물리력에 의한 정권 장악과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 등에 대해 학생들의 비판과 저항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 측면도 상당히 있다. 학생운동은 그 동안 비민주적인 정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용인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어 과거와 같은 형태로 불법적인 집단적 시위와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증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과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내에 존재하는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고, 사회도 안정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극단적인 노사분규, 자연의 자정능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대학생들이 공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극렬한 시위, 부의 편재와 지역개발의 격차에 대한 불만 등은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다. 국민복지의 증진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해 “최소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로 이해되고 주장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정부가 사회 문제의 해결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기능은 모든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대 국가는 실업이나 빈곤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규제하고 조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그 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빈부와 지역간의 개발 격차가 매우 크고, 기업주와 노동자간의 관계가 형평을 잃어 왔다. 그리하여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정부로 이행되면서 참여 폭발과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분배와 지역간의 균형개발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절대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소득 분배의 공정성, 균형적인 지역개발 등의 복지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재정능력에 적합한 수준의 각종 사회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겠다.

라. 민주적 시민의식의 함양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 접근 하거나 집단적 시위와 같은 비합리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즉 한국 국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거나 법을 준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다.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모든 선거가 정당의 정강과 선거공약에 의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출신지역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투표행태는 민주 정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적인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한 국민들로 변화되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자율적 시민 양성은 학교 교육의 충실과 정치인들의 시범적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회 지도층이 불법적 행동을 하고, 탈법이 유리한 입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민주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 평화통일의 실현

한국이 안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국토의 평화통일이다. 분단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는 국가 안보이고,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흡수 통일과 단계적 통일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토 통일과 함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모색하고 추구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

2. 해원상생 정치의 실현

아직도 한국은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많다. 한국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는 등 민주정치가 오도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념으로서 해원, 상생, 보은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순사상이 한국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대순사상 속에 있는 해원상생은 바로 인존과 자유, 평등과 사랑, 평화와 통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속에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적 정치가 제대로 행해져야 되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해원상생 정치의 실현은 자유·평등·인권의 존중 등과 같은 이념과 가치에 대한 신념이 정치 사회의 규범으로써, 그리고 생활 방법으로 나타날 때 가능한 것이다. 즉 해원상생의 기본 이념이 형식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규범으로 제도화되고 행동 양식으로 구체화될 때 진정한 민주정치를 향해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해원상생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 즉 해원상생적 정치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원한을 풀어 주는 정치는 정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사회의 여러 집단들의 원한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원한을 갖고 있는 국민과 집단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소득분배와 지역개발의 격차로 인한 불만은 정치권력에 대해 원한을 갖게 만들었다. 국가권력이나 정책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의식의 공유로 공동의 원한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원한으로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과거 독재권력에 항거하다 커다란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비민주적 정치체제에서 소외 당한 사람들은 원한을 갖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에 저항한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편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집단도 원한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 빈곤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또는 빈곤이 세습된 사람들은 원한을 갖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과 후보자들도 원한이 많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 하더라도 선거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원망하고, 반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선거는 매우 치열하여 금권선거로 이루어져, 선거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따라서 선거에 패배한 후보자는 가산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한이 더욱 커진다.

정치권력의 남용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원한을 갖고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 문 민정부에서도 특정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집단은 원한을 갖고 있다. 또는 각종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비합법적인 권력행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원한을 갖고 있다. 해원정치를 위해서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원통해 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의 원한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해원의 정치란 척을 지지 않는 정치를 뜻한다. 척을 지지 않는 정치를 위해서는 민존정치(民尊政治)를 실현해야 한다. 원한을 풀어 주는 정치는 이제까지 쌓인 원한을 풀어 주는 과거지향의 정치라 한다면, 척을 지지 않는 정치는 앞으로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라 할 수 있다.³³⁾

33) 지난 1996년 8월 19일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당내 대통령후보군들을 겨냥한 경고메시지가 담긴 매우 이례적인 언급을 했다.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후보군들을 향한 경고이고, 또 하나는 이흥구대표 중심의 단합을 거듭 강조한 점이다. 후보군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분명하다. “단체(정당)생활의 최대 덕목은 구성원의 언행을 통일하는 것이다. 돌출발언을 한다든가, 당의 목표를 저해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고까지 공언했다. 이러한 경고발언을 의식한 탓인지 8월 23일 치러진 신한국당 대구개편대회에서 차기 대권후보 중의 한 사람인 이회창 고문은, 격려사에서 “자율과 민주화되지 않은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 당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고 했는가 하면, 26일 치러진 신한국당 경주울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이흥구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집권 여당이 야당과 다른 것은 책임을 지는 정당이다. … 이같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신한국당이 나라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 고 했다. 이어 최형우 고문은 “경주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 지역 위원장들과 함께 이 최형우가 앞장 서겠다. … 아무래도 이웃 사촌이 낯지 않겠느냐. …” 고 했는가 하면, 이한동 고문은 “우리 정치의 제1 과제는 망국적 지역감정과 지역 할거 정치를 타파해 국민대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 라고 했다. 그리고 박찬중 고문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민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반대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들의 의사를 경시하거나, 기본권을 유린하는 정치는 척을 지게 된다. 그리고 반대 정당과도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민주정치는 본질적으로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치 권력이 형성되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이다. 이러한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척을 지지 않는 정치이다. 국민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는 정치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 상생적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상생은 남이 잘되게 하는 정치라 할 수 있다. 민주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치이다. 이러한 민주정치를 실현하려면,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집단만이 잘되려는 행동을 해서는 구현될 수 없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집단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행동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상생적 정치는 공존 공생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실제의 정치과정에서 반대집단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정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 보다는 극한적 대립과 무한적 경쟁만이 존재한 정치로 상생적 정치가 아니라, 상극적 정치만이 존재해 왔다. 그 결과 여당과 야당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도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극적 정치로 인하여 국민들은 냉소주의가 팽배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정당이 아무리 훌륭한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선거공약을 제시해도 신뢰하지 않고 기만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난국을 맞아 당직이 무거운 사람들은 온몸을 내던져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 ... 그렇지 못하면 당과 국민에게 불충한다는 지탄을 받게 된다. ...” 고 했다. 이러한 발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대권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 직접회법은 피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회창 고문의 발언은 마치 김대통령의 「독불장군」 발언에 대한 「반박」의 의미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만약 그 의심이 맞다면 그것이 바로 서로 척을 짓게 하고 원한을 사게 하는 일례로서 해원상생적 정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조선일보, 1996년 8월 20일.; 세계일보, 1996년 8월 24일

한국이 상생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집단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대 정당과 반대 입장에 있는 정치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하겠다.

이러한 해원상생적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가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대 대중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 통합의 상징이 되며,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사회 통합과 합리적인 정치 결정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인간은 완성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며, 어떤 인간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인간은 혼자서 고립되어 고고하게 살아갈 수 없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과 더불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은 개성과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는 아니다.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개인의 행위와 선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사회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삶의 지혜의 축적인 각종 질서와 전통을 내면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과 인간과 사회와의 참된 관계를 망각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

상제께서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공신에게 이르기를, ‘네가 허물을 뉘우치고 습성을 고치지 아니하면 앞날에 난경이 닥쳐오리라’고 하였는가 하면, 또 어느 날 개벽 공사가 속히 결정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김광찬에게 이르기를,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마음을 돌려 어리석음을 벗으라. 너희는 죽는 일을 장차 나에게서 보라’³⁴⁾라고 하였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정당, 또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한편 통치권자들은 집권 초기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집권 기간이 계속되면서 권력에의 지나친 집착으로 정치 지도자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34) 앞의 책, “행록: 4-37, 4-55.”, p. 72, 79

국민 의사를 빙자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었음을 망각하여, 국민으로부터 원한을 갖게 하는 비민주적인 정치 행태를 자행하였다.

정치 지도자 특히 통치권자는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에게 척을 지는 정치를 아무런 죄의식없이 자행하여 왔다. 정치 지도자들이 해원상생적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하였던 것이다. 행정위주의 정치 내지는 행정독재의 정치가 횡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 행태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비합법적인 강제 권력으로 탄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국민들은 해원하여 마음의 자유를 되찾고, 화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지도자에 대해 답답한 가슴을 치며 원한만을 쌓아가게 되었다.

상제께서는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제민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도를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역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라고 하였는가 하면,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나니라’³⁵⁾라고 하였다.

한국이 보다 발전된 민주정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서로 척을 짓지 말고, 원한을 풀어 주고 서로 도와 주는 해원상생의 생활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가들도 해원상생적 정치를 할 때 민주정치는 가능할 것이다.

35) 같은 책, “교운: 1-16, 1-36.”, p. 160, p. 170

VI. 결 론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자유로운 개인과 인간의 평등화를 추구하면서, 국민의 지지로 합법적인 정치 권력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발전은 국민이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의 참여에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에 있는 것이다. 즉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자주적 인격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적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민주정치는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개인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일정한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이상의 달성이 합리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척을 짓지 않으며 원한을 풀어 주며, 남을 잘 되게 하는 올바른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도와주는 가운데 상호 조화를 이루는 해원상생적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현하고 자아실현에 필요한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이념 구현도, 한국 민주정치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도 이러한 해원상생적 정치 논리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원상생적 정치 자체가 하나의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적절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요소를 갖추어 나갈 때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대순 사상과 한국 정치의 관계를 살펴본 서설적인 연구였다. 이제까지 한국 정치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대순 사상과 연관지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대순 사상과 한국 정치에 관한 학계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한국 정치가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적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관점에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저 서

가. 한국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指針』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대순진리회 교무부, 『포덕교화기본원리』 대순진리회 교무부, 1975

문창주, 『한국정치론』 일조각, 1980

홍기운, 『지역주의와 한국정치』 백산서당, 1996

나. 서 양

Edward Shils, *Political Development in New States*, The Hague, London, Paris
: Mouton & Co. , 1965

Maurice Duverger, *Sociologie Politique, 3d ed.* ,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2. 논 문

양무목,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一고찰, 연구논집 : 제11집」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1

양무목, 「14대 총선과 국민의 선택, 새물결:봄호」 자유평론사, 1992

양무목, 「선거법 고쳐야 한다, 자유공론」 자유공론사, 1992

양무목, 「한국의 의회정치와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18집」 한국정치학회, 1984

3. 기 타

동아일보, 1996년 4월 13일 ~ 20일

세계일보, 1996년 8월 20일 ~ 28일

조선일보, 1996년 8월 28일 ~ 9월 6일